

왜 그랬을까... 망신살 뻗친 조선대의대 교수 전남대 교수 이름 도용 무고성 진정서 남발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비난 내용 광주시·국가기관에 수십통 투서 부서 업무 마비 등 행정력 낭비 시, 손해 청구 등 법적 대응 검토 검찰 송치...배경 놓고 관심

사립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국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의 이름을 도용해 광주시와 다수의 국가기관에 무고성 진정서를 남발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집중 감사를 받는 등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한 광주시는 해당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조선대, 광주지검,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동부경찰서에 명의 도용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명의도용·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선대의대 L교수를 입건하고, 지난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형사조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린 상태다.

수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선대의대 L교수는 올 들어서만 5개월여 동안 전남대의대 모 교수 명의로 광주시와 광주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수십여 통의 투서를 제출했다.

광주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는 해외 환자 유치에 위해 광주시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모여 결성한 사단법인이다.

진정서 내용은 주로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회장단에 대한 허위성 내용과 함께 파면을 주장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예산 집행을 흥청망청하고 있는데도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많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 같은 혐의회의 문제점과 비리를 알고 있는 광주시가 감사를 하지 않고 방치 또는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성 글도 담겨 있다.

L교수의 무고성 진정서 때문에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관계자들은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 의료산업팀으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으며, 시 의료산업팀 등도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자신들의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자체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무고성 진정서를 처리하느라, 휴가까지 반납한 채 수개월간 진땀을 빼야 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는 업무가 일시 마비 되는 등 심각한 행정력 낭비 현상을 겪기도 했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양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얽힌 무고성 진정 사건이 조선대 내부에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각종 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두 교수는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에 대한 무고성 진정서를 투서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두 교수를 아는 주변인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L교수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개인적 감정에 의해 타인명의를 도용해 투서에 나선 것이라 추측성 말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7년과 지난해 5월 등에도 이번 무고성 진정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컴퓨터 서체까지 동일한 진정서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접수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중이다. 시는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선대측에 소속 교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기관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고성 진정사건으로 감사 등을 받느라 관련 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이 각종 오해를 받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고 큰 스트레스도 받았다"면서 "무고성 진정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치가 훈련비 명목 금품 받아”...학부모 9명 고소장

순천의 한 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일 순천교육지원청과 전남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순천의 모 여자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가 학부모로부터 특별 훈련비 명목 등으로 매달 1인당 30만원씩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해당 여중과 여고 학부모 9명은 A씨가 3년 전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전남체육회 전문체육지도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3~6월 특별훈련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A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전남체육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에 나섰다.

특히 A씨는 중학교를 졸업할 3학년 학생을 여고 기숙사에 합숙시키며 훈련을 시켰지만, 해당 교육청은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고교 운동부에 진학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합숙을 시켰다고 해도, 다른 학교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청의 지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권위 “내부 고발자 해당기관에 알려주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7년 1월 경찰과 전남도, 대한체육회 등에 자신이 소속한 전남 A군체육회 직원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신고했다. 내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 해 2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대한체육회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리신고서와 이름이 적힌 민원 우

편을 A군체육회에 전달했다.

A군 생활체육위원회는 2017년 7월 진정인에 대해 품위유지의무·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고, 진정인이 재직을 신청하자 강박·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없는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인 신원이 노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된다"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새 총장 선거 중지하라” 법원에 가치분 신청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새로운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치분을 신청했다.

강 전 총장은 “최근 광주지법에 조선대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총장은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 심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총장으로서 지위가 보전된 만큼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법인 이사회는 대학자치협회를 중심으로 차기 총장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0월 1일 차기총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기후환경산업전 개막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자전거를 작동해 북극곰 모양 풍선에 바람을 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중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동창회에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중순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중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

게 된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광주 가정폭력 증가율 전국 최고 수준

지난해 1215건...36% 늘어

광주의 가정폭력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는 1215건으로 2017년(891건) 대비 324건이 증가,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은 2017년 1394

건, 2018년 1556건으로 162건(증가율 11.6%)이 증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는 2016년 4만5619건에서 2017년 3만8583건으로 감소하다 2018년 4만1905건으로 증가했다. 가정폭력범죄 유형으로는 폭력이 85.1%로 가장 많았으며, 재물손괴(6%), 협박·모욕(4.9%), 감금(0.3%)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헤어진 여친 감금한 40대, 경찰 조사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 안에 감금한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경찰조사 중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돼 망신살.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42)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1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28)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광주시 서구 차평동의 한 모텔

에 투숙한 뒤 집에 가려는 B씨를 감금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들켰다는 것.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로 측정됐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투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비밀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임야

바로 삽니다, 맹지 사절 문의. 010-6834-74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